

제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2007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연대 15년,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는 남북,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서 참가했으며,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함께 참가했다.

1991년 오랜 침묵을 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용기있는 증언이후, 우리는 생존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 배상 등 권고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천황’ 유죄판결 등을 쟁취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여성인권과 평화, 정의를 실현하고자 힘써온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연대활동의 성과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배상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합류하기는커녕 아베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교훈을 저버리고, 일본국 헌법 9조 개약 시도를 통해 위협적 전쟁국가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에 해산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기금’ 방식의 해결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의회 121호 결의안 채택움직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노력, 국제인권단체의 연대확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는 생존자나 가해/피해 해당국가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연대의 힘을 더욱 굳게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지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정부의 1993년 ‘고노담화’ 재검토 움직임을 반대하며, 이를 위해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책적 실행과 책임을 동반한

공식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도록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4. 우리는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및 여성박물관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역사기록과 기억계승, 시민교육에 힘쓸 것이다.

5.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국제연대회의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연대 15년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2007년 5월 21일

제8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